

원	자	력	人	을		위	한
글	쓰	기		특	강		

정범진·왕성민 지음



원자력인을 위한 글쓰기 특강

발행처 | (사)한국원자력안전아카데미
지은이 | 정범진·왕성민
만든이 | 최수경
만든곳 | 글마당
기획 | 한은옥
책임 편집디자인 | 정다희

(등록 제02-1-253호, 1995. 6. 23)

만든날 | 2021년 7월 20일
펴낸날 | 2021년 8월 22일

주소 | 서울시 송파구 송파대로 28길 32
전화 | 02. 451. 1227
팩스 | 02. 6280. 9003
홈페이지 | www.gulmadang.com
이메일 | vincent@gulmadang.com

ISBN 979-11-90244-23-7(03070) 값 7,000원

◆ 허락없이 부분계재나 무단 인용은 저작권법의 제촉이 될 수 있습니다.
◆ 잘못된 책은 바꾸어 드립니다.

이 도서는 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
임(No. 2020M2C7A1A0107944412).

차례

머리말 _ 6

01 기사쓰기의 기초 왕성민(법률방송 기자)

1. 기사의 종류 _	8
2. 리드 쓰기 _	10
3. 기사 작성의 실제 _	14
(1) 스트레이트 기사 작성법 _	15
(2) 기획기사 작성법 _	17
(3) 인터뷰 기사 작성법 _	25

02 오피니언·칼럼쓰기 왕성민(법률방송 기자)

1. 분량 _	30
2. 유형 _	30
3. 구성 _	31
(1) 제1유형(논술형 5문단 구조) _	31
(2) 칼럼 작성의 실제 _	33
(3) 제2유형(미팔식) _	46
(4) 제3유형(에세이식) _	46

03 실전 글쓰기 정범진(경희대학교 원자력공학과 교수)

0. 들어가기 _	48	4. 주의사항 _	57
1. 작성단계 _	49	솔직하라 _	57
어떤 말을 하고 싶은가? _	49	만연체 _	58
실마리 _	50	산만한 글 _	58
전개 _	51	정신일도 _	60
결론을 먼저 생각 _	51	짧게 줄이기 _	61
2. 글을 탄탄하게 만들기 _	51	5. 마음가짐 _	62
줄이기 _	51	할 말이 있어야 한다 _	62
군더더기 떼어내기 _	52	낭중지추 _	62
글 늘리기 _	52	듣는 사람에 맞춰라 _	62
눈이 떨어지면 나쁜 글 _	53	내 편으로 만들기 _	63
순차적으로 이해되는 글 _	53	맺집 _	63
적절한 표현 찾기 _	53	6. 마무리 _	64
글을 잘 쓰려면 잘 읽어야 한다 _	54		
3. 완성시키기 _	54		
집중력 10단계 _	54		
뜸 들이기 _	55		
다른 사람에게 읽히기 _	56		
제목 뽑기 _	57		

머리말

다소 성마른 측면이 있지만 이러한 실천적 가르침이 더 효과적이라고 믿습니다.

독자 제현 여러분! 모두 이 책을 통해 나름의 글쓰기 요령을 체득해 소통 역량을 갖춘 동량지재(棟梁之才)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원자력은 다른 과학과 달리 국민과의 소통이 특히 중요한 분야입니다. 원자력 산업은 국방·안보 등 국가 안위와 직결되어 있어 정책 결정자의 각별한 이해가 요구되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공공 재원을 통해 원자력 연구와 산업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가기 위해서는 대중적 지지가 필수적입니다.

2021. 8. 10
지은이 정범진·왕성민

하지만 대부분의 이공계 종사자들이 그렇듯이, 원자력인도 국민과의 소통에 미숙합니다. 소통의 방법보다는 내용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원자력계는 대중과 고립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소통과 글쓰기에 관한 전문서적이 아닙니다. 저자들이 몸으로 부딪혀 가며 배운 실전 글쓰기 경험을 낱것 그대로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01 기사쓰기의 기초

왕성민(법률방송 기자)

1. 기사의 종류

기사를 분류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다. 일반적으로 실무에서는 ▲발생기사 ▲기획기사 ▲인터뷰기사 ▲보도자료 기사 등으로 구분해 널리 활용한다.

발생기사는 사건기사, 현장기사라고 부른다. 기자의 주관을 배제하고 실제 발생한 사건(event)을 객관적으로 보도하는 기사다. 발생기사의 핵심은 정확한 사실관계를 압축적으로 전달하는 것이다. 따라서 문장이 건조하고, 양식도 정형화돼 있다. 신속한 정보전달을 목적으로 하는 스트레이트(Straight) 기사의 대부분이 발생기사다.

기획기사는 기자가 현실에 개입해 사회 변화를 추동하는데 주안점을 둔다. 정보전달에 목적을 둔 스트레이트 기사와 달리,

기획기사는 사건의 원인과 배경을 분석해서 대안을 제시하거나 여론을 환기하기 위해 쓴다.

기획기사의 양식은 다양하다. 기자가 현장에 깊이 침투해 여러 가지 현상을 낱것 그대로 보여주는 ‘르포르타주’가 대표적인 기획기사다. 르포 기사는 독자로 하여금 마치 현장에 있는 듯한 감정을 전달하고, 기사에 대한 공감대를 이끌어내야 하기 때문에 완성도 높은 스토리텔링과 치밀한 구성이 요구된다.

인터뷰 기사는 사건이 아닌 사람에 초점이 맞춰진 기사다. 인터뷰 대상이 살아온 모든 과정을 시간 순서대로 짚어나가는 일대기 형식의 인터뷰 기사와 특정 사건에 대한 인터뷰 대상의 시각을 조명하는 기사가 보편적으로 쓰인다. 인터뷰는 인물의 내면을 잘 파헤치면서 맥락에 맞게 사건을 연결시켜야 하기 때문에 연차가 높은 기자들이 주로 쓴다.

보도자료 기사는 취재원이 제공하는 자료를 바탕으로 쓰는 기사다. 독자적인 취재에만 의존해서는 기사 생산성이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많은 기자들이 기업·정부·시민단체 등이 배포하는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취재하거나 기사를 쓰게 된다. 일부 보도자료의 경우 기사의 형식에 맞춰 제공되기 때문에 이를 살짝 각색해 그대로 기사화하는 경우도 많다.

2. 리드 쓰기

종류를 불문하고 모든 기사는 도입문, 즉 리드(lead)를 가지고 있다. 실무에서는 종종 야마(やま)라고 하기도 한다.

정보전달이 중요한 발생기사에서 리드는 핵심 내용을 요약해서 보여주는 역할을 한다. 리드만 봐도 사건의 개략적인 내용을 독자가 파악할 수 있게 써야 한다. 스트레이트 기사의 리드는 1~2문장 정도의 압축적인 진술로 이뤄져 있다. 아무리 길어도 3문장을 넘겨서는 안 된다.

[예시1] 문재인 대통령은 31일 청와대 민정수석실 반부패비서관에 김기표(49·사법연수원 30기) 법무법인 현진 대표변호사를 임명했다. 신현수 전 민정수석의 사의 파동 이후 지난 4일 김진국 신임 민정수석 체제가 출범한 데 따른 후속 인사다.

[예시2] 2014학년도 수능시험 시계지리 문제 출제 오류로 피해를 입은 학생들이 국가로부터 배상을 받게 됐다. 법원은 수능시험이 차지하는 중요성과 국민적 관심도에 비춰볼 때 출제기관과 감독기관의 주의 의무가 강도높게 요구된다며 국가의 책임을 인정했다.

[예시3] 범죄수익으로 얻은 가상화폐도 몰수 대상이라는 첫 판결이 나왔다. 몰수는 범죄와 관계있는 재산을 박탈하는 것으로, 법원이 가상화폐의 재산적 가치를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리드만 읽어도 본문 내용이 유추된다. 기사의 요체를 알 수 있도록 리드를 작성했기 때문이다. 이밖에 사건·사고 기사의 경우에는 6하 원칙에 맞춰 좀 더 정형적으로 구성한다. 언론사마다 차이가 있으나, ‘누가-언제-어디서-(누가)-무엇을-어떻게(왜)’ 순으로 작성한다.¹⁾

[예시4] 16일 오전 11시 20분쯤 서울 강남구 역삼동 인근 한 빌딩에서 고등학교 2학년 A(16)양이 남성 아이돌 그룹 OOO의 멤버 사진을 찍다가 발을 헛디뎈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예시 4]는 언제(16일 오전 11시 20분쯤), 어디서(강남구 역삼동 인근 한 빌딩), 누가(고등학교 2학년 A양), 무엇을(아이돌 그룹 사진

1) 남재일·이재훈, 저널리즘 글쓰기의 논리, 22면.

을 찍다가), 어떻게(추락사)라는 요건을 정확히 맞춘 정형적인 사건기사다. 기자들은 초년병 시절 이 같은 스트레이트 기사를 반복적으로 쓰면서 숙달하게 된다.

기획기사의 리드는 발생기사와 다르다. 기획기사 리드의 목적은 독자로 하여금 호홉이 긴 기사를 읽고 거기에 공감하게 만드는 것이다. 따라서 질문(화두)를 던져 문제의식을 환기시키거나, 특정 현장을 묘사하듯 그리면서 시작하거나, 다른 사람의 말을 인용하면서 시작하는 등 다양한 변용이 활용된다. 물론 압축·요약적 진술도 널리 활용된다.

‘내러티브’가 중시되는 기획기사는 ▲기사의 구조 ▲문단의 배열 ▲사건의 성격 ▲취재의 방식 ▲문체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 리드가 정해진다.

[예시5] 초원에 비가 내려 바람이 습했다. 도착 전 사흘간 내린 비로 고랑이 파이고 도로 일부가 물에 잠겼다. 연 평균 강수량이 300mm에 불과한 몽골에서는 이례적인 상황이었다.
“비포장 도로에 흙이 질펀해져서 천천히 가야 합니다. 버스가 웅덩이에 빠지면 빠져나올 방법이 없어요.”

통역을 맡은 현지인 절라(33)가 말했다. 수도 울란바토르(Ulanbataar)에서 북서쪽으로 130km가량 떨어진 인구 5,400명의 소

도시 보르노르(Bornuur)로 가는 길은 멀고도 험했다. 법원 국제봉사단 ‘희망여행(공동대표 위광하 서울고법 고법판사, 정준호 부산고법 사무국장)’이 5년간 꾸준히 찾은 곳이다.²⁾

법원 국제봉사단이 몽골에서 펼친 봉사활동 내용을 르포형식으로 작성한 기사다. “초원에 비가 내려 바람이 습했다”는 식의 문학적 수사가 활용돼 독자의 관심을 유도하고 있다. 이어서 몽골 통역인의 말을 인용해 장소와 시간에 대한 현장감을 전달하고 있다.

[예시6]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친환경 전기차 개발·생산 계획을 속속 밝히고 있는 가운데 현대제철이 전기차 전용 플랫폼에 적용되는 새 특수강 개발과 생산에 나선다.

[예시7] 법무부(장관 박범계)가 1일 인권 친화적 법무행정 강화를 위한 ‘인권 모니터링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검찰·교정·범죄예방·외국인 정책 등 법무행정에 있어 인권 친화적 기준을 강화하라는 관계 기관의 요구에 부응한다는 취지다.

2) ‘사막화 방지’ 위한 작은 정성... ‘지역축제’로 결실 맺어, 법률신문(2019. 8. 7, 왕성민 기자)

보도자료 기사의 경우 스트레이트 기사와 크게 다르지 않다. 보도자료는 취재원이 특정 사실을 널리 알리기 위해 배포하는 자료이므로, 처음부터 리드를 만들어서 제공하는 경우가 많다.

보도자료는 성격상 홍보(PR) 목적이 강하기 때문에 객관성을 유지하면서 취재원이 원하는 맥락을 정확하게 전달해야 한다.

3. 기사 작성의 실제

모든 기사는 리드와 본문으로 구성돼 있다. 기사거리가 있을 경우 이를 스트레이트 형식으로 다룰지, 아니면 기획기사로 엮을지 등을 판단하는 것은 기자와 데스크의 몫이다.

기사의 방향이 잡혔다면 리드를 작성하고, 본격적으로 본문을 작성한다. 이때 기사의 분량을 정하는데 발생 기사의 경우 4~5문단, 1,000자 안팎으로 쓰는 경우가 많다. 기획기사는 기사 내용을 고려해 4,000자~1만 자까지 작성한다. 너무 많을 경우 시리즈로 작성하기도 하니 기획기사에는 정해진 분량이 없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1) 스트레이트 기사 작성법

靑 반부패비서관에 김기표... 이광철 민정비서관은 유임
(법률방송뉴스 2021.3.31.)

[리드] 문재인 대통령은 31일 청와대 민정수석실 반부패비서관에 김기표(49·사법연수원 30기) 법무법인 현진 대표변호사를 임명했다. 신현수 전 민정수석의 사의 파동 이후 지난 4일 김진국 신임 민정수석 체제가 출범한 데 따른 후속 인사다.

[본문1] 김 신임 비서관은 부천고, 서울대 법대를 나와 사법시험 40회에 합격한 뒤 광주지검 순천지청과 서울동부지검 검사,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 수석검사 등을 지낸 이른바 ‘특수통’이다.

[본문2] 검찰을 떠난 뒤 2016년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법조 비리 게이트에 연루된 홍만표 전 감사장의 조세포탈 사건에서 변호인을 맡았다. 2015년에는 포스코 비리에 연루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의 공동 변호인도 맡은 적이 있다.

[본문3] 이날 인사에서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관련 의혹, 신현수 전 민정수석과의 갈등설 등 각종 논란으로 사의설이 나왔던 이광철 민정비서관은 유임됐다. 이미 사의를 표한 것으로 알려진 김영식 법무비서관도 유임됐다.

리드 작성법에 대해서는 앞서 설명했다. 본문을 바로 확인해보자.

총 507자(字)로 된 위 기사는 청와대 신임 반부패비서관에 김기표 변호사가 임명됐다는 소식을 전달하고 있다.

이미 리드에 김기표 변호사의 나이와 경력, 새로 맡을 직책 등 핵심 정보가 담겨있기 때문에 이어지는 본문 1, 2, 3은 리드를 보조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리드와 바로 이어지는 [본문1]에서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김 비서관의 학력과 경력이 개략적으로 기술돼 있고, 본문2에서는 다시 커리어에 있어서 특기할 만한 점을 상술했다.

스트레이트 기사의 핵심은 정보전달이다. 따라서 팩트 체크를 거친 객관적인 사실만 담아야 한다. 만일 뒤에 다른 사람의 말을 인용해 인물평을 늘어놓는다면 기자나 데스크의 주관이 개입하게 되므로 삼가는 것이 좋다.

본문은 리드에 적힌 내용을 구체화하면서 상술하는 방향으로 2~3문단 정도 작성하면 된다. 인물이면 해당 인물의 경력이나 특징을, 사건이면 해당사건의 발생원인과 피해규모 등 팩트

를 2~4문장으로 구성해 배치한다.

다만 사실이라 하더라도 어떤 사실을, 어떻게 배치했느냐에 따라 평가가 엇갈릴 수 있다. 본문2의 마지막 문장에는 김 신임 비서관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의원의 변호를 맡았다는 사실이 적혀있다. MB정권에 비판적인 현 정권에서 이상득 의원 변호를 맡을 사람을 청와대 비서관으로 임명한 것은 정치적 관점에서 시사하는 점이 크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을 부각시킨 것이다.

(2) 기획기사 작성법

기획기사의 경우 먼저 형태를 정해야 한다. 언론사마다 기획 기사를 다루는 고유한 양식이 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 같은 형식적 제약이 많이 사라지고 있는 추세다. 스토리 라인만 탄탄하게 구축할 수 있다면 자(字) 수나 형식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지면 구독이 점차 줄어들고, 인터넷 기사가 보편화되면서 나타난 현상 중 하나이기도 하다.

기획 기사를 쓸 때 기자는 먼저 세부목차를 구성해야 한다. 독자들을 설득(혹은 공감)시키려면 타당성 있는 근거를 논리적으로 엮어 주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 고강도 부동산 규제에 법조계 안팎서 위헌 논란
(법률신문, 2020. 7. 23.)

정부가 집 값을 잡겠다고 연일 고강도 부동산 시장 안정 대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일부 규제 내용은 개인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해 위헌(違憲)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어 법조계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치솟는 집값을 잡기 위해 정책적으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부득이하다는 견해도 있지만,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인 재산권에 대한 과도한 국가 개입이 일상화 될 경우 법치주의 근간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많다.

◇‘토지’ 아닌 ‘주택’ 거래 허가? = 논란의 시발점은 지난달 17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6.17 부동산 대책)’이다. 이 가운데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서울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과 송파구 잠실동 등 4개 지역을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것이 가장 먼저 도마에 올랐다. 정부는 잠실과 코엑스 일대에 국제교류복합지구 조성이 예정돼 있으며 인근에 영동대로 광역복합환승센터, 현대차 글로벌 비즈니스센터(GBC) 등 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므로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내년 6월 22일까지 주택을 사고 팔 때 관할 구청장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거나 부동산 가격의 30% 이하 금액 내에서 벌금을 내야 한다.

재산권 침해 논란이 있지만 토지거래허가제도 자체가 위헌인 것은 아니다. 헌법재판소는 “토지거래허가제는 사유재산제도의 부정이 아니라 이를 제한하는 한 형태이고, 투기적 토지거래의 억제를 위해 그 처분을 제한하는 것은 부득이한 것으로서 재산권에 대한 본질적 침해가 아니”라며 “국토이용관리법이 벌금형과 징역형을 선택형으로 규정한 것도 입법재량의 문제이고 과잉금지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88헌가13, 92헌바5 등).

하지만 이번 규제에서 거래허가 대상은 ‘토지’가 아니라 사실상 ‘주택’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하중 서강대 로스쿨 명예교수는 “일단 형식적인 요건은 갖췄지만, 신도시 조성 등 대규모 택지 개발을 염두에 둔 토지거래허가제도의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이미 고밀도 개발이 완료된 지역에 이를 적용하는 것은 어색한 측면이 있다”며 “아파트의 경우 ‘건물분’이 ‘토지분’에 비해 훨씬 높은 경우가 일반적이데, 토지거래 규제 수단을 통해 건물거래를 통제하는 상황은 사실상 ‘아파트 거래 허가제’로 규제를 확장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원래는 사전허가를 받지 않았던 자유로운 영역에 심사가 개입되면서 거래 당사자들은 실거주 여부를 정부에 소명해야 하는 등 부담이 늘었는데, 이는 자유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꼬

집었다.

대형로펌의 한 변호사도 “영동대로 개발 등을 이유로 삼성·대치·청담·잠실동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것은 △개발 구역에 비해 과도하게 넓은 지역을 지정했다는 점 △이미 아파트가 건축돼 이 개발과 직접적으로 관계 없는 아파트 대지까지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토지거래허가제도의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 △사실상 아파트 가격 상승을 막기 위해 지정한 것이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돼 위헌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실제 헌법소원 등으로 이어질 경우 위헌 결정이 나오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규제 내용을 엄격하게 따질 경우 기본권 침해가 우려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사회적 필요성과 국민 감정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할 때 위헌 판정이 나올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 **재건축 단지서 2년 실거주 않으면 ‘강제청산’**=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의 재건축 주택 소유자에 대한 ‘실거주 2년’ 의무화 방안도 도마 위에 올랐다. 지금까지는 재건축 사업 추진 때 거주 여부와 상관없이 주택 소유자에게 조합원 자격요건을 부여했지만 앞으로는 재건축 단지의 경우 2년 이상 실제로 거주한 사람에게만 분양 신청을 허용하기로 했다.

대형로펌의 한 변호사는 “2년 실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조합원 분양권을 부인하고 현금 청산만 인정하는 것은 사실상 ‘주택 수용’에 가깝다”며 “이미 재건축부담금, 분양가 상한제같이 재건축에 따른 이익을 제한하거나 환수하는 장치들이 마련돼 있는데도 이 같은 부담을 또다시 지우는 것은 재건축 주택 소유자의 수인 한도를 넘어서는 과도한 재산권 침해로 볼 수 있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반론도 만만치 않다. 실거주 요건은 올 12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후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는 사업부터 적용되므로 일각에서 주장하는 소급입법이 문제되지 않는데다 재건축이 투기수단으로 변질되는 것을 막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라는 것이다.

한 재개발 전문 변호사는 “재건축 단지 실거주 2년 요건의 헌법상 쟁점은 과잉금지원칙 위반, 거주이전의 자유 제한 여부로 귀결된다”며 “투기과열지구에만 요건이 적용되므로 범위가 협소하다는 점, 부동산 투기 근절이라는 당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책적으로 실거주를 분양권 획득에 필요한 하나의 기준으로 제시하는 것은 헌법의 테두리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대치동 은마아파트 등 여러차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를 신청했다가 고배를 마신 곳이 많다는 점에서 조합 설립 시기를 올 연말로 못박아 놓은 것은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비판도 여전히 존재한다.

위헌 논란 부동산 대책 쟁점 정리

삼성·대치·청담·잠실동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재건축 주택 2년 실거주 않을 시 분양 박탈	‘임대차 3법’ 소급적용
* 토지거래허가제를 주택거래 허가제로 확대 적용 * 과잉금지 원칙 위반, 주거이전의 자유 등 침해	* 요건 불충족시 강제 현금 청산은 사실상 주택 수용 * 과잉금지 원칙 위반, 재산권 침해	* 계약갱신권 등 보장 하면서 기존 계약에도 소급 적용 가능성 피력 * 소급입법금지 원칙 위반

◇ ‘임대차 3법’ 소급적용 땀 위헌성 높아= 정부와 여당이 7월 임시국회 통과로 목표로 야심차게 추진 중인 ‘임대차 3법’을 둘러싼 시비도 끊이지 않고 있다. 임대차 3법은 △계약갱신 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임대차 신고제 도입을 골자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부동산거래법 개정안 등을 가리킨다. 그런데 지난 10일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기존 계약에도(임대차 3법을) 적용하면 임차인의 주거안정 문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직접 소급적용 가능성을 내비치자 거센 반발이 이어졌다.

집주인과 임대인들은 정부의 임대차 3법 소급적용 방침이 소급입법 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며 18일 서울 중구에 있는 예금보험공사 건물 앞에서 규탄 집회를 열기도 했다.

한 변호사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당사자들은 계약 당시 적용되는 임대차보호법의 규율을 받을 것을 기대할 수밖에 없다”며 “이에 따라 이미 체결한 계약의 내용, 즉 확정된 법률관계를 추후 개정된 법률을 통해 변경하겠다는 것은 명백한 소급입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시 또는 천재지변과 같은 상황이 아님에도 소급입법을 시행하는 것은 사적자치의 원칙과 국민의 재산권에 대한 부당한 침해이며 위헌 소지도 높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변호사는 “임대차 3법이 시행될 경우 세입자의 주거안정성이 획기적으로 높아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 계약에까지 소급해 적용할 경우 당연히 위헌 논란이 불거질 것”이라며 “정부와 여당이 이 같은 리스크를 감수하면서까지 굳이 소급적용을 강행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위의 기사는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정책이 헌법상 재산권, 주거이전의 자유를 제한해 위헌성이 높다는 점을 지적하기 위해 작성됐다.

따라서 기사의 세부 목차인 ◇‘토지’ 아닌 ‘주택’ 거래 허가?

◇**재건축 단지서 2년 실거주 않으면 ‘강제청산’** ◇**‘임대차 3법’ 소급적용 땀 위험성 높아** 등 세 개의 꼭지는 모두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하나하나 짚어보면서 전문가 견해를 빌려 위헌 소지가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먼저 국토교통부 등 정부부처에서 배포한 자료를 바탕으로 취재원인 법률전문가(변호사, 대학교수)의 견해를 구해 가장 위헌성이 높다고 판단한 정책 세 가지를 별개의 꼭지로 나눴다. 각 꼭지는 다시 ‘정책내용 → 전문가 비판’의 도식적인 구조를 취했는데, 이는 기자의 판단이 아닌 해당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성을 갖춘 사람들의 의견을 담아 설득력을 높이는 전형적인 서술 방식이다.

취재원의 수준이 높을수록 멘트의 질이 높아지고 주장의 설득력도 강화된다. 수준 높은 취재원을 얼마만큼 활용했느냐에 따라 기사의 품질이 달라진다. 이것은 기자의 능력을 평가하는 척도이기도 하다.

또 기자는 전문가의 설명을 국민 모두가 이해하기 쉽게 풀어서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기자는 전문직과 일반 시민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면서, 전반적인 사회 수준이 상향 평준화될 수 있도록 기여해야 한다. 자신의 취재영역에 대해 끊임없이 탐구해

야 한다. 법조기자가 법을 모르고, 의학전문기자가 의학을 모르고, 문화부 기자가 문학과 예술에 문외한이어서는 안 된다. 적어도 전문가의 견해를 듣고 시비(是非)와 옥석(玉石)을 구분하는 능력은 갖춰야 한다. 따라서 취재원들과 깊이 있게 교류하면서 지식과 시야를 끊임없이 넓혀나가야 한다.

그런데 전문가 집단일수록 폐쇄적이고 보신(保身)에 예민하다. 그래서 취재원을 확보하기 쉽지 않다. 전문가 집단의 이러한 속성은 특유의 엘리트 의식에서 기인한다. 진입장벽에 높은 학문 영역에서 나름의 성취를 이룩했기 때문에 “내가 최고”라는 선민의식이 바탕에 깔려있다.

따라서 기자는 전문가에 질문을 할 때 허술하게 해서는 안 된다. 두루뭉술하게 질문하면 “그게 질문이냐”는 매서운 비판에 직면하게 된다. 질문을 할 때는 마치 큰 스님과 문답을 한다는 마음으로 충분히 공부하고 신중하게 해야 한다. 질문 수준이 높을수록 구체적이고 알찬 대답을 얻을 수 있다.

(3) 인터뷰 기사 작성법

인터뷰 기사는 크게 3단계 과정을 거쳐 작성된다.

1단계 - ‘누구를 인터뷰할 것인가’

2단계 - ‘무엇을 물어볼 것인가’

3단계 - ‘어떻게 구성(배치)할 것인가’

가장 중요한 건 인터뷰 대상자 선정이다. “말이 되는 사람”, “이야기가 되는 사람”을 찾아야 한다. ‘흙속의 진주’ 같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허명(虛名)만 있는 사람도 있다. 기자는 취재 영역에서 보석 같은 존재를 발굴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줘야 한다.

일단 인터뷰 대상이 선정됐으면 그 다음에는 인터뷰 형식을 정해야 한다. 인터뷰 형식에 따라 질문도 달라진다. 인터뷰이의 인생을 시간 순서대로 조망하는 인터뷰라면 가정환경에서부터 학창시절 에피소드까지 담길 수 있다. 따라서 인터뷰가 난삽해지지 않도록 인생의 ‘변곡점’을 찾아낼 수 있는 질문을 던져야 한다. 이 경우 막연하게 질문하면 인터뷰가 사정없이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사전 질문지를 꼼꼼하게 작성하고 답변 분량도 어느 정도 제한하는 것이 좋다.

가정환경과 정치성향 등 사생활이 부각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런 경우 우회적인 질문을 통해 자연스럽게 성향이 묻어나올 수 있도록 질문해야 한다. 물론 이러한 질문을 하기 위해서는 인터뷰이에 대한 사전 정보를 충분히 숙지해야 한다.

[예시8]

지양해야 하는 질문	우회 질문
선친의 직업은 무엇이었나요.	유년시절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뭔가요.
종교가 어떻게 되시나요.	독거노인을 위한 배식봉사를 오랜 기간 하셨던데, 봉사활동을 시작한 계기가 궁금합니다.
현 정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최근 정부가 발표한 ‘탈원전 정책’에 대한 의견이 궁금합니다.

인생을 조명하는 것이 아닌 특정 현안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한 인터뷰의 경우, 인터뷰 대상자의 관심영역을 중심으로 질문을 작성해야 한다. 인터뷰 기사의 중심은 기자가 아니라 인터뷰이다. 최고의 인터뷰 기사는 기자와 인터뷰 상대방의 관심사가 공통분모로 깔려있고, 인터뷰이가 설파하고 싶은 내용을 콕 콕 찍어 질문을 할 때 만들어진다.

[예시9] 인터뷰 사전 질문지

- ▶ 3명의 후보가 박빙의 승부를 벌인 끝에 당선하셨는데, 승리의 핵심 요인을 꼽는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 ▶ 전체적으로 선거가 치열했던 만큼 갈등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당선이 되신 만큼 다른 후보를 지지했던 회원들도 끌어안아야 하는데, 복안이 있으신지요?
- ▶ 000시의 산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시청 내부 개혁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내부 개혁 과제 중 가장 시급한 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 ▶ 000, 000를 공약으로 제시했었는데, 재정 건전성 유지와 청년층 부담 완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어떻게 잡으실 계획인가요.
- ▶ 선거 당시 당선자님의 캐치프레이즈가 너무 전투적이어서 오히려 대국민 설득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다른 후보의 공약 중 흡수해서 시정에 반영하고 싶은 공약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 ▶ 선거기간 제시했던 다양한 공약들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대 국회 업무 역량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면서, 대관업무 등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있습니까?
- ▶ 앞으로의 포부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구슬이 서 말이어도 꿰어야 보배다. 인터뷰 기사의 화룡점정(畫龍點睛)은 구성과 배치다. 인터뷰 대상자의 워딩을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여러 번 퇴고해 글의 완성도를 높여야 한다.

인터뷰를 하고 나면 인터뷰이가 특별히 방점을 둔 영역이 보인다. 바로 그 지점에 무게 중심이 실리도록 인터뷰 기사를 구성해야 한다.

인터뷰 기사의 중심은 인터뷰 대상자이지만 기사를 쓰는 건 기자다. 기자는 일종의 ‘프레임 형성권’을 갖는다. 따라서 인터뷰이가 한 말을 편집해 기자(또는 언론사)의 입맛에 맞게 재가공하고 싶다는 유혹에 빠질 수 있는데, 이 경우 자칫 인터뷰 대상자가 곤란을 겪게 될 수 있으므로 언론인의 양심에 맞게 인터뷰 기사를 해야 한다.

02 오피니언·칼럼쓰기

1. 분량

기본적인 칼럼의 분량은 1500~2000字 사이가 적절하다. 원고지로는 6~10매, A4용지로는 글자 크기 10pt로 대략 한 페이지 안팎이다. 보통 외고를 요청받을 때 칼럼 분량을 묻는 경우가 많다. 언론사가 따로 언급하지 않더라도 통상 6~10매를 기준으로 적어 보내면 무난하다.

2. 유형

대부분의 오피니언은 시론(時論)이다. 현안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드러내는 것이다. 전문직의 경우 자신의 고유한 견해를 사

안에 포섭시킬 필요가 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원론적인 말(소위 ‘공자님 말씀’)이나 에세이를 써달라고 전문가에게 기고를 부탁하지는 않는다.

논설위원과 주필(主筆)처럼 언론인들로 이뤄진 필진이 아니라면, 대부분은 외고는 시론의 범주를 넘지 않는다.

3. 구성

(I) 제1유형(논술형 5문단 구조) ★

- ▶ 도입(주장)–근거–사례–주장강화–결론(두괄식)
- ▶ 도입–설명–주장–주장강화–결론(중괄식)

영미식의 5문단 구조를 차용한 논술문 구조다. 글자 수는 300-400-500-400-300(字)를 기준으로 잡는다.

두괄식과 중괄식이 많이 쓰이는데, 칼럼쓰기에 입문자에게는 두괄식을 추천한다. 중괄식은 글의 짜임새가 단단하지 않으면 논지가 흐트러질 수 있다.

두괄식 칼럼의 도입부는 논제를 함축하고 있는 상황을 간략

하게 서술하고 그것에 대한 의견을 드러내는 것으로 시작한다.

주장의 강약을 통해 칼럼의 논조가 결정되는데, 뚜렷하게 표현할수록 강도가 높아진다. 반대로 메타포(metaphor, 은유)를 동원할수록 주장의 강도는 약화된다.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권에서는 직설화법을 꺼리는 경향이 있어 주장의 강도를 적절하게 완화해 에둘러 표현해야 품격 있는 글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러한 기조가 점점 변하고 있다. 이른바 비유를 통해 ‘적당히 알아들어라’는 식의 글보다는 단도직입적으로 치고 들어가는 매서운 칼럼이 대세로 떠올랐다.

중괄식 칼럼은 도입부와 설명문단을 통해 상황을 소개하면서 독자에게 화두를 던지고, 문단 중간에 주장을 넣는다.

두괄식 칼럼이 검토의 ‘머리 베기’라고 보면, 중괄식 칼럼은 ‘허리 베기’라고 볼 수 있다. 동성애나 노조 문제, 젠더 이슈와 같이 당사자 간 대립이 첨예한 논란에 대해 말할 때 주로 활용된다. 주의를 환기하면서 주장의 당위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복선을 곳곳에 배치해 주장에 힘을 실어 넣는 방식이다.

중괄식 칼럼의 핵심은 초반 상황설명을 통해 독자의 마음을 주장에 경도시켜야 한다는 점이다.

칼럼은 객관적인 글이 아니다. 사견(私見)을 주장하는 글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편향적이다. 과학적 엄밀성과 반증가능성, 객관성을 추구하는 이공계 종사자의 글이 힘이 없는 이유가 여기 있다.

과학자는 “내 주장이 틀렸으면(반증 가능성이 있다면) 어떡하지?”라는 두려움이 인문·사회과학 전공자에 비해 크다. 칼럼은 논문이 아니다. 말 그대로 오피니언(opinion), 여러 견해 중 하나의 의견에 불과하다. 정치·사회 문제에 정해진 답은 없다. 타당한 근거만 있으면, 자신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밀어야 글에 힘이 생긴다. 따라서 오피니언에는 칼럼니스트의 취향과 세계관이 녹아들어가 있다.

(2) 칼럼 작성의 실제

“과학자 출신이 아닌 사람을 과학기술부 장관에 임명하면 안 된다”라는 주제로 기고문을 작성하고자 한다. 1유형 두괄식을 적용한다면 다음과 같은 개요를 작성할 수 있다.

서론에서는 간결하게 상황을 압축하면서도 주장하는 바가 명징하게 드러났다. 이 글에서는 청와대가 환경운동가 출신을

[도입]

29일 청와대는 새 과학기술부 장관 후보자로 김OO을 내정했다고 밝혔다. 대학생 때부터 환경운동에 투신해 온 김 후보는 대표적인 반핵·탈원전 운동가로 2030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환경정책 소위원회 위원장을 맡으며 정계에 입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그가 XX지역 기름유출 사건의 주범으로 지목된 K기업을 강도 높게 비판한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하지만 대학에서 사회학을 전공하고, 시민운동가로 활약해 온 김 후보가 과학 정책을 총괄하는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든다.

과학기술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했다는 사실을 요약 서술하고, 이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을 밝히고 있다. 전형적인 칼럼의 도입부다. 주장의 강도는 ‘中’인데, 강도를 높이려면 “~의문이 든다”라는 표현 대신, “김 후보는 과학 정책을 총괄하는 역할에 어울리지 않는다.” 등의 직설적인 화법을 사용하면 된다.

문장은 총 4문장으로 구성됐다. 글자 수는 302자다. 도입부 구성의 핵심은 ‘절제’다. 절대로 개인적인 감정을 드러내서는 안

된다. 그러면 도입부가 난삽해져 글의 밸런스가 무너질 뿐만 아니라 품위를 떨어뜨릴 수 있다.

[근거]

- 1) 과학은 진입장벽이 높은 학문이기 때문에 비(非) 과학도는 정책 판단에 필요한 과학적 사실을 제대로 이해하기 어렵다.
- 2) 모든 과학 부문이 고도로 발달한 현대 사회에서 ‘과학적 맥락(context)’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정책을 좌우하는 역할을 맡는다는 것은 상상하기 힘들다.
- 3) 수장(首將)이 현안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면 조직 자체가 외풍에 휘둘려 과학계 발전이 저해될 수 있다.
- 4) 과학 정책은 한 번 무너질 경우 오류를 수정하는데 큰 사회적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 5) 뿐만 아니라 기술입국을 표방하는 우리나라에서는 국가 경쟁력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 6), 7), 8) ...

근거 문단은 주장의 뒷받침 기능을 수행한다. 브레인스토밍을 통해 다양한 아이디어를 쏟아낸 다음 인과관계에 맞춰 짜임새 있게 구성해야 한다. 주장의 설득력은 합리적인 근거 제시에 달려있다. 근거 문단이야말로 글의 중추이며, 완성도를 결정한다. 근거를 난잡하게 열거하기 보다는 1~2개의 핵심근거를 논증의 형태로 깔끔하게 구성하는 것이 좋다. 논증 형태로 구성한다는 말은 근거의 제시가 ‘대전제-소전제-결론’ 등과 같은 추론 구조를 갖춰야 한다는 뜻이다. 문장의 인과관계를 염두에 두고 흐름을 짜면 된다.

[사례]

1) 직접 사례

김 후보는 환경단체 재직 시절, “기술발전이 조금 더디게 이뤄지더라도 아름다운 우리나라의 자연 환경을 보존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해야 한다”, “과학이 인류에게 남긴 것은 원자폭탄과 같은 대량학살무기, 환경파괴 뿐이다”〈월간 환경평화 2009년 8월호 참조〉 등의 반 지성적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또 지난해 히로시마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 환경연합 컨퍼런스 기조연설에서는 “한국도 더 이상 핵융합으로 이뤄지는 원

자력 발전에 기대서는 안 된다”고 말해 과학적 무지를 드러냈는데, 이어진 기자와의 간담회에서도 “핵분열이든 핵융합이든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답변해 구설에 오르기도 했다.

2) 간접 사례(예화, 역사적 경험)

러시아 로켓의 아버지로 불리는 세르게이 코롤료프(Сергей Павлович Королёв, 1907~1966)는 1930년대 소련의 ‘반작용 연구 그룹’에서 로켓 연구에 몰두했다. 하지만 초기 연구 성과가 시원찮게 나오자 내무인민위원회(NKVD)는 그를 국고낭비 혐의로 악명 높은 수용소인 ‘굴락’에 보내버렸다. 그는 수용소의 엄혹한 생활 때문에 치아가 모두 뽑히게 되는 고초를 겪게 된다.

20세기 초에는 로켓 개발 연구가 막 첫걸음을 뗀 걸음마 단계에 불과했다. 많은 도전과 실패가 잇따를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 같은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는 비전문가 집단에 의해 능력 있는 과학자만 억울하게 희생된 셈이다.

사례는 과거사례와 현재사례를 모두 사용할 수 있는데, 일반인에게는 보편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과거사례가, 전문가에게는 현안과 관련된 현재사례가 더 설득력 있게 다가온다. 사례에 독자가 공감할수록 글의 품질이 높아진다. 자신의 지적능력을 자랑하는 어려운 예시가 아니라 평범하면서도, 누구나 이해하

기 쉬운 사례를 제공해야 한다. 현안과 관련된 사례를 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는다.

[주장 강화]

1) 보강 설명 방식

환경보호 필요성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 다만 김 후보의 원리주의적 성향이 구체적인 정책과 결합될 경우 과학계의 큰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자정범위 내의 오염물질 배출’조차 환경 파괴로 바라보는 김 후보의 인식은 핵(核) 공학 등 특정 분야의 발전을 크게 위축시킬 공산이 크다.

과학계 원로들도 잇따라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최OO XX대 명예교수는 청와대 발표 이튿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김 후보가 임명될 경우 현재 진행 중인 주요 국책 연구에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2) 도약 방식

비 과학자가 과학기술부 장관에 임명될 경우 이와 같은 실수가 반복될 수 있다. 과학 정책은 백년대계(百年大計)로, 일관성 있게 추진돼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춧돌을 잘 괴어놓아야 하는데, 전문성을 갖춘 안목 있는 인재가 이 같은 역할을 맡아야 한다.

3) 반론-재반론 방식

과학을 전공하지 않은 사람도 정책 판단을 하는데 무리가 없다는 반론도 나온다. 합리적 판단능력을 갖췄다면, 참모조직의 도움을 받아 충분히 훌륭한 과학기술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할 수 있다는 취지다.

하지만 과학기술 분야는 어느 직렬보다 진입장벽이 높다. 관련 현안을 심도 있게 이해하는데 요구되는 전문성은 보편적 합리성과 분별력을 훨씬 상회하는 수준으로 요구된다.

따라서 비 과학자가 적극적인 조력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단기간에 이러한 능력을 갖추는 것은 쉽지 않다.

주장과 근거·사례를 엮어 다시 한번 독자를 설득하는 과정이다. 서론의 주장에서 중립적이었던 독자가 근거와 사례문단을 거치는 동안 설득력을 느끼면, 주장강화 문단에서 필자의 논지에 적극 동조하게 된다. 도입부에서 나온 주장을 한 번 더 서술하는데, 강화부문에서는 도입부보다 주장의 정도(뉘앙스)를 한 등급 올리는 것이 원칙이다.

주장강화 문단에서는 반론-재반론 구조를 적용해 활용할 수 있다. 이것은 논술문 뿐만 아니라 칼럼에서도 적극 활용된다.

[결론]

최종 후보에 올랐으나, 아쉽게 탈락한 것으로 알려진 이OO 박사가 과기부 장관에 더 적합한 것으로 보인다. 물리학 전공자인 이 박사는 오랜 기간 다양한 기관에서 과학교육 관련 정책을 다뤄 뛰어난 실무 감각을 갖췄을 뿐 아니라 최근까지 SCI급 논문을 매년 발표해 높은 학술적 역량을 보여줬기 때문이다. 여러 모로 김OO을 최종 후보로 낙점한 청와대의 선택이 아쉽다.

칼럼의 결론은 논술문과 다르다. 대부분의 논술문이 결론에서 주장을 반복하거나 환기하는데 그친다면, 칼럼은 단순 비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대안까지 제시해야 한다. 구체적인 타당성 있는 결론을 통해 사회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칼럼의 목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관념적인 구호로 끝나는 결론은 지양해야 한다.

5문단 구조는 칼럼쓰기에 처음 도전하는 초보 칼럼니스트를 위한 ‘품새’와 같다. 엄격하게 글자 수를 맞추거나, 문단의 형식에 얽매일 필요는 없다.

실전 겨루기에서는 품새를 통해 익힌 동작을 자연스럽게 응용해야 한다. 칼럼을 자주, 많이 쓰다보면 전체적인 흐름(flow)을 무너뜨리지 않으면서도 완성도 높은 글을 쓸 수 있다.

[예시]

오피니언

2020년 9월 24일 法律新聞

차별금지법, 냉정과 열정 사이



서초포럼

한애라 교수
성균관대 로스쿨

지난 6월 29일 정의당 정책위의원 대표발의로 차별금지법안이 발의되었다. 21대 국회 회기 시작으로부터 두 달도 안 되어 발의된 이 법안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향한 진보의 열정과 열정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

이번 법안은 그동안 논의된 차별금지법안의 종합판이라고 할 만하다. 금지되는 차별의 사유로는 성별, 장애, 나이, 언어, 출신 국가, 출신민족, 인종, 국적, 피부색, 출신지역,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및 가구의 형태와 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흔 전과, 성적지향, 성별 정체성, 학력, 고용형태, 병력 또는 건강상태, 사회적 신분 등 총 23개를 적시하고 있다. 이는 외국의 법이나 국제협약에 적시된 모든 차별사유를 거의 망라한 것이다. 차별금지의 영역은 고용, 재화·용역·시설 등의 공급·이용, 교육, 행정서비스를 모두 포함하고, 각 영역별로 금지되는 구체적인 차별행위에 관하여는 다시

31개에 이르는 상세한 조항을 두고 있다. 차별행위에 대한 구체적으로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민사적 손해배상청구권과 악의적 차별에 대한 징벌적 배상, 차별행위에 대한 전면적인 증명책임 전환, 고용차별과 관련된 정보공개청구권, 차별행위 진정자에 대한 불이익조치 금지와 위반자에 대한 형사처벌 등 다양한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있어야 한다. 헌법상 평등권이나 개별적 차별금지법만으로 사회 곳곳에서 다양한 형태로 행해지는 수많은 차별을 시정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주요 선진국들도 이미 대부분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였다. 그러나 법은 열정만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차별행위를 어디까지 어떻게 규제하는 것이 효과적인지, 어떤 법안이라도 현실적으로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는지는 냉정하게 따져

보아야 한다.

차별금지 사유 중 자기 책임으로 풀릴 수 있거나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성별, 인종, 성적 지향, 성적 정체성, 용모, 출신지역, 종교 등은 반드시 차별금지 사유로 삼아야 하지만, 국적, 학력, 전과 등은 더 논의해 볼 여지가 있다. 차별의 영역을 보면, 고용, 교육, 의료, 교육, 신용, 필수적 서비스 영역에서의 차별은 우선적으로 금지되어야 한다. 그 밖의 사회 영역에서는 재화·용역 공급업체나 시설물의 규모에 따라 차등을 두거나 차별행위의 유형을 한정하는 것을 검토해 볼 만하다. 차별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어떤 증명책임이 바로 전환되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일정 사항은 피해자가 입차적으로 증명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차별 사유나 행위태양에 관하여 ‘등’을 적절히 활용하거나 핵심사항을 제외한 나머지를 시정행에 위임하여 운영의 효율을 살리는 방법도 있다.

중요한 것은 법이 통과되는 것이다. 법이 제정되고 나면 그걸 집행으로 조금씩 차별금지의 지평을 넓혀갈 수 있다. 비판을 경청하고 타협하여 다수가 수긍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 이제 차별금지법 제정이 필요하다.

※사외(社外) 필진의 칼럼·기고문은 본지의 편집 방침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차별금지법, 냉정과 열정사이”

한애라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률신문, 2020년 9월 24일자

[도입]

지난 6월 29일 정의당 장혜영 의원 대표발의로 차별금지법안이 발의되었다. 21대 국회 회기 시작으로부터 두 달도 안 되어 발의된 이 법안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향한 진보의 염원과 열정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

상황에 대한 압축적 설명이 제시된 도입부다. ‘진보의 염원과 열정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는 긍정적 서술이 차별금지법에 대한 찬성 입장을 완곡하고 드러내고 있다. 주장이 배제돼 있어 길이는 2문장, 200자 안팎으로 짧은 편이다.

[설명]

이번 법안은 그동안 논의된 차별금지법안의 종합판이라고 할 만하다. 금지되는 차별의 사유로는 성별, 장애, 나이, 언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국적, 피부색, 출신지역,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및 가구의 형태와 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점과,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학력, 고용형태, 병력 또는 건강상태, 사회적 신분 등 총 23개를 적시하고 있다.

이는 외국의 법이나 국제협약에 적시된 모든 차별사유를 거의 망라한 것이다. 차별금지의 영역은 고용, 재화·용역·시설 등의 공급·이용, 교육, 행정서비스를 두루 포함하고, 각 영역별로 금지되는 구체적인 차별행위에 관하여는 다시 31개에 이르는 상세한 조항을 두고 있다. 차별행위에 대한 구체책으로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민사적 손해배상청구권과 악의적 차별에 대한 징벌적 배상, 차별행위에 대한 전면적인 증명책임 전환, 고용차별과 관련된 정보공개청구권, 차별행위 진정자에 대한 불이익조치 금지와 위반자에 대한 형사처벌 등 다양한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차별금지법을 잘 모르는 독자를 위해 차별금지법에 대한 상

세한 설명을 곁들이면서, 밑줄 친 부분을 통해 차별금지법 도입의 정당성을 은연 중에 강조하고 있다.

[주장]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있어야 한다. 헌법상 평등권이나 개별적 차별금지법만으로 사회 곳곳에서 다양한 형태로 행해지는 수많은 차별을 시정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주요 선진국들도 이미 대부분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였다. 그러나 법은 열정만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차별행위를 어디까지 어떻게 규제하는 것이 효과적인지, 어떤 법안이라야 현실적으로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는지는 냉정하게 따져 보아야 한다.

[주장강화]

차별금지 사유 중 자기 책임으로 돌릴 수 없거나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성별, 인종, 성적 지향, 성적 정체성, 용모, 출신지

역, 종교 등은 반드시 차별금지 사유로 삼아야 하지만, 국적, 학력, 전과 등은 더 논의해 볼 여지가 있다. 차별의 영역을 보면, 공공, 고용, 의료, 교육, 신용, 필수적 서비스 영역에서의 차별은 우선적으로 금지되어야 하나, 그 밖의 사적 영역에서는 재화·용역 공급업체나 시설물의 규모에 따라 차등을 두거나 차별행위의 유형을 한정하는 것을 검토해 볼 만하다. 차별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하기만 하면 증명책임이 바로 전환되도록 하는 것도 좀 과하다. 일정 사항은 피해자가 일차적으로 증명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차별 사유나 행위 태양에 관하여 등을 적절히 활용하거나 핵심사항을 제외한 나머지를 시행령에 위임하여 운영의 묘를 살리는 방법도 있다.

[결론]

중요한 것은 법이 통과되는 것이다. 법이 제정되고 나면 그걸 출발점으로 조금씩 차별금지의 지평을 넓혀갈 수 있다. 비판을 경청하고 타협하여 다수가 수긍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 이제는 열정보다 냉정이 필요하다.

(3) 제2유형(미괄식) ★★

- ▶ 사례-설명(상황)-비판(찬성)-결론(4문단)
- ▶ 사례-설명(상황)-비판(찬성)-근거-결론(5문단)

(4) 제3유형(에세이식) ★★★

사례와 통찰을 한 번에 섞어서 설명하는 방식이다. 주관성이 매우 강한 글이므로 독자의 주의를 집중시키기 위해 문장력이 요구되는 편이다. 김훈 작가가 한겨레 신문에 기고하는 ‘거리의 칼럼’이 대표적인 사례다.

코너링(김훈/ 거리의 칼럼 2020. 5. 25)

도심지 사거리에서 빨간불이 켜지면 라이더들은 신호 대기하는 자동차들의 틈새를 비집고 맨 앞으로 나와서 돌격선 상에 대기한다. 신호가 바뀌면 오토바이들은 총알처럼 튀어 나가서 코너링한다. 사람의 몸과 오토바이가 옆으로 기울면서 90도 길모퉁이를 돌아 나가는데, 이때 각도를 오버해서 복원력을 회복하지 못하면 어찌 되는가. 이것은 생사를 넘나드는 코너링이고 백척간두의 코너링이다.

(중략)

이들은 책임과 비용과 위험을 모두 짊어지고서 아무런 생산수단이 없어도 ‘사장’ 대접을 받는다. 플랫폼에는 뿔뿔이 흩어진 노동자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다.

문학의 대가답게 문장력이 일품이다. 김훈 작가는 소설에서도 플롯보다는 문장력이 서사를 주도한다는 평가를 많이 받는다. 위의 칼럼에서도 ‘백척간두의 코너링’이나 ‘다닥다닥 붙어있다’ 등의 문학적 수사가 가감 없이 쓰였다. 하지만 과하다는 인상을 주지 않고, 오히려 흡입력을 더 높여주고 있다.

03 실전 글쓰기

정범진(경희대학교 원자력공학과 교수)

0. 들어가기

원자력 부문은 공공의 영역에 있고 원자력 시설의 설치와 운영뿐만 아니라 연구개발사업의 예산조달 등 전 부문에서 대중, 정부 등에 수용성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지난 20년간 500여 편의 기고를 하면서 경험으로 배운 글쓰기의 요령을 적어봅니다.

제대로 배운 글솜씨가 아니라 실전을 통해서 체득한 것들이기 때문에 제대로 배운 사람의 눈에는 초라한 것일 수 있겠지만 글쓰기는 배움이 아니라 훈련입니다. 피아노의 ‘도’가 어디에 있는지 배우는 것으로 피아니스트가 되는 것이 아니라 훈련을 통해야 하듯이 글쓰기도 배운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훈련이 필요한 것이지요. 이 글은 여러분 글쓰기 훈련의 참고 자료 정도로 삼아주시기를 바랍니다.

1. 작성단계

어떤 말을 하고 싶은가?

글을 쓰기 전에 ‘무슨 얘기를 해주고 싶은지(주제)’를 먼저 정해야 한다. 사실 그것이 글을 쓰는 이유이기도 하다. 또 그것이 없다면 그것은 글이 아니다. 그런데 주제를 확실히 정하지 않고 글을 쓰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 주제를 막연히 정하면 글도 산만해지고 글의 흐름도 막연해진다. 주제가 막연한데 글을 쓸 수 있다면 아마도 그 글은 좋은 글이 되기 어려울 것이다. 메시지를 전하기 위한 글이 아니라 스트레스를 풀기 위한 수다와 같은 글이 될 것이다.

이 점이 가장 중요하다. 글을 쓰는 사람은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확실해야 한다. 그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글을 쓸 수밖에 없어야 한다. 배고파서 밥을 먹는 사람과 배고프지 않은 사람의 밥을 먹는 태도는 다를 것이다. 글은 쓰지 않고 견딜 수 없는 메시지가 있어야 한다.

실마리

글을 쓸 때 맨 처음에 어디에서부터 출발해서 글을 써야 할까? 스웨터에 한 오라기 가닥 나와 있는데 그것을 잡아 뿔다 보면 스웨터가 전부 풀려 나가듯이 글의 시작점을 찾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 시작 지점이 보이지 않으면 글을 쓸 수 없다. 시작점이 보이지 않는데 억지로 글을 썼다면 백과사전을 읽는 것처럼 나열식이 되어서 재미없고 순리적으로 풀리지 않아서 읽기 어려운 글이 될 것이다. 글은 단순히 내용을 모두 담고 전달하는 것이 아니다. ‘이야기(Story)’를 만들어야 한다. 따라서 실마리를 어디로 잡을 것인가에 대하여 많은 고민과 아이디어가 필요하다.

전개

실마리에서 시작해서 내가 말하고자 하는 주제까지 전개하기 위하여 많은 소재들이 논리적으로 나열되어야 한다. 우리가 부모님께 용돈을 요구할 경우에도 이와 같은 단계를 거친다. ‘학용품을 사야 한다.’ ‘쓰던 것이 전부 떨어졌다.’ ‘친구들은 모두 신제품을 쓰고 있다.’ 등 여러 가지 얘기 가운데 무엇을 먼저 제시하고 어떤 논리를 전개할 것인지, 어떤 부분에서 부모님의 공감을 끌어낼 것인지 계획한다. 당연히 글쓰기에도 그런 계획이 필요하다. 어디서 출발할 것인가? 무슨 얘기를 할 것인가? 무슨 사례를 들을 것인가? 어떻게 자극할 것인가? 글쓰기도 마찬가지로이다.

일필휘지로 시원하게 작성된 것 같은 글은 그렇게 시원하게 작성된 것이 아니라 글의 소재와 전개의 과정을 논리적으로 탄

탄하게 만들기 위해 갈고닦은 결과이거나 그렇게 오랜 기간 훈련한 결과일 뿐이다. 쉽게 읽혀지는 글이 쉽게 씌어진 글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결론을 먼저 생각

어떤 형태로 결론을 내릴 것인지 나눠볼 수 있다. 의견을 제시할 것인지 혹은 상대를 비난할 것인지 대안을 만들어줄 것인지 등 여러 가지 다른 형태가 있다. 자신의 주장을 어떤 형태로 결론을 지을 것인지를 먼저 정하고 글을 써야 한다. 쓰다보니 결론이 정해지는 식의 무계획적인 글은 일관성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설득력을 가지기 어렵다.

2. 글을 탄탄하게 만들기

줄이기

만일 3000자 글이 필요하다면 30~50% 정도를 더 쓸 것을 권한다. 그리고 그것을 줄여서 3000자를 만든다. 그렇게 되면 군더더기 없고 내용적으로 탄탄한 글이 나온다. 3000자라고 해서 3000자 혹은 그 이하를 써놓고 이리저리 굴러도 좋은 글이 되지 않는다. 잣수를 크게 염두하지 않고 글을 작성하고 아까와 하지

말고 줄이는 편이 좋다. 노력을 낭비하는 것이라 여기지 말고 독자의 시간을 아껴준다고 여겨야 한다. 글을 쓰는 사람은 독자가 메시지를 확실히 받아들일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하는 것이 좋다,

군더더기 떼어내기

훈련받지 않은 글은 수식어와 접속사가 많다. 수식어와 접속사가 없어도 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글을 쓰다보면 이상하게 접속사가 있어야지만 글이 매끄럽게 이어지는 것 같은 착각을 한다. 군더더기다. 이 군더더기를 떼어내야 다이내믹한 글이 나온다. 이것 또한 글을 줄이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군더더기가 떨어져 나가기도 한다. 수식어가 많으면 본질이 초라해진다. 본질이 초라한데 수식어라는 꽃을 단다고 해서 좋아지기를 기대하기 어렵다.

글 늘리기

어떤 경우에는 글을 다 썼는데 잣수를 늘릴 것을 요구받는 경우가 있다. 어떻게 할까? 군더더기를 붙여서 글을 늘리면 글의 호흡이 전반적으로 느려지고 잣수가 쉽게 늘어나지도 않는다. 이 경우에는 다루지 않았던 새로운 소재로 새로 글을 써 넣어야 한다. 그것을 논리적으로 끼워넣는다. 논리적으로 끼워넣

는다는 것은 독자가 새로 쓴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알 수 없어야 한다는 뜻이다.

눈이 떨어지면 나쁜 글

글을 읽기 시작했다면 끝까지 쭉 읽을 수 있어야 좋은 글이다. 그런데 중간에 눈이 떨어지거나 딴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은 글이 잘못 작성되었다는 것을 뜻한다. 흥미로운 글을 읽을 때는 단번에 끝까지 읽게 된다. 불과 2000자 정도의 글이 한 눈에 읽히지 않는다면 잘못된 글이다.

순차적으로 이해되는 글

글을 읽다가 보면 ‘뭐지?’하고 가우뿔하다가 일단 계속 읽다가 보면 나중에 ‘아! 그런 것이구나!’하고 이해가 되는 글이 있다. 이것은 소설이나 극은 그렇게 쓸 수 있다. 그러나 보고서나 논문은 읽으면서 ‘그래 그래!’하고 이해가 가도록 써야 한다. 누군가 ‘아! 그런 것이구나!’라고 말한다면 그 말을 하기 전까지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뜻이다.

적절한 표현 찾기

어떤 것을 표현할 때 적절한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딱 맞지는 않지만 비슷한 단어만 떠오른다면 딱 맞는

단어를 찾을 때까지, 동의어 사전,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서 딱 맞는 단어를 찾아야 한다. 그런데 이 노력을 게을리해서 딱 맞지 않는 유사단어로 글을 쓰다가 보면 나중에 완성된 후 도저히 고칠 수 없는 글이 된다. 뜻이 확실하지 않은 부분이 도처에 나타나기 때문에 어찌 해볼 수 없는 것이다. 적절한 단어를 선택하는 것은 나중에는 할 수 없다. 쓰는 바로 그 순간에 제대로 찾아 넣어야 한다.

글을 잘 쓰려면 잘 읽어야 한다

실패하는 식당 주인은 요리기술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맛을 보지 못하는 것이 문제이다. 자기 음식의 맛을 제대로 본다면 맛이 날 때까지 조리법을 개선할 것이기 때문이다. 글을 못쓴다는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정독의 능력이 없다. 글을 쓰고 수정하는 과정의 핵심은 자기 글을 읽는 것이다. 잘 쓰지 못하는 이유는 잘 읽지 못하기 때문이다.

3. 완성시키기

집중력 10단계

글을 쓰다가 80% 정도 완성되고 나면 게으른 마음이 든다.

다음에 맑은 정신으로 한 번 쪽 보면 고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다. 그것은 악마의 속삭임이다. 결코 맑은 정신인 때는 오지 않는다. 다음에 잘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만 하고 싶다는 것이다. 지금 이 순간이 쓰고 있는 글에 대한 이해가 가장 높은 때이다. 지금 20%를 채워서 완성하는 것이 쉽다. 다음에는 20%를 채우려면 글을 다시 읽고 상기해야 한다. 그것은 그 이상의 노력을 해야만 완성된다는 뜻이다.

나중에 다시 보고 완성도를 높인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 순간 완성도를 더 높이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을 리가 없다. 글을 쓰는 순간 100% 완성시켜두고 나중에 다시 검토하는 것이 글의 완성도를 높이는 방법이다.

글을 쓰는 동안 집중력 10단계 중 5~6단계로 쓰더라도 마무리 단계에서는 최고 단계로 집중을 해야만 만족스러운 마무리가 된다. 이런 집중을 하지 못하면 80% 완성도로 자기 이름을 달고 굴러다니는, 이도저도 아닌 글이 나온다.

품 들이기

글은 주관적인 것이다. 자신이 쓴 글도 며칠 후면 느낌이 달라질 수도 있다. 지금 글을 잘 썼다고 생각해도 며칠 후에 다시

보면 만족스럽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다고 붙잡고 마냥 고치다고 해서 좋아지지 않는다. 지금 글을 최대한 완성시켜 놓고 며칠 글을 완전히 잊어버릴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시 한번 보라. 그러면 그 글의 단점들이 발견된다. 이 과정을 뜸 들이기라고 한다. 막 완성된 원고가 바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며칠간 숙성할 때까지 기다리라는 것이다. 그렇게 하다가 보면 추가해야 될 부분이 생각날 수도 있고 독단에 빠져 주관적으로 쓴 부분을 깨닫게 된다. 이때 가장 중요 요소는 자신이 쓴 글을 새로운 시각으로 보기 위해 며칠 동안 그 글을 잊어버리는 것이 중요하다.

다른 사람에게 읽히기

글은 내가 어떤 의도로 썼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읽는 사람에게 어떤 뜻으로 읽히는가가 중요하다. 내가 어떤 뜻으로 쓴 것은 중요한 게 아니다. 독자가 내가 쓴 의도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 글은 망한 글이다. 내가 쓴 글을 남의 글처럼 읽을 수 있을까? 입으로 소리를 내면서 다른 사람에게 읽어주다가 보면 문제를 찾을 수 있다. 눈으로 읽던 때와 다른 것을 알 수 있다. 그보다 효과적인 것은 자신의 글을 누군가 다른 사람에게 읽히고 내가 쓴 것과 같은 의미로 받아들이는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연구실의 학생들이 내 글쓰기의 오류를 찾아주는 선생이 된다.

제목 뽑기

내가 글을 써도 제목은 다른 사람이 더 잘 뽑을 수도 있다. 특히 신문사에 투고할 경우 신문사에서 제목을 고쳐 오기도 한다. 자기가 쓴 글에 대해서 고치는 것을 거부하고 화를 내는 사람들도 있다. 물론 그 사람들이 인생 역작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대충 쓴 글에 대해서도 고집을 부리는 사람도 있다. 제목과 잣구수정은 전문가들이나 제3자가 더 잘 할 수도 있다. 자기 글에 대해서 고집할 필요는 없다. 전문가가 좋은 제목을 뽑아주면 그것이 더 맞을 수도 있다. 관계자 모두가 좋은 글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니까.

4. 주의사항

솔직하라

잘난 체하는 글, 허식, 나중에 피해를 당할까봐 방어적인 글. 이런 것들은 독자들에게 다 읽힌다. 글쓰는 이의 이런 태도가 읽혔을 때 이미 독자를 잃은 것이다. 이 때부터 글의 주제는 그들의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 잘난 체하는 글을 독자가 읽어 주어야 할 이유는 없다. 독자에 전할 메시지가 자기 자랑이라면 그건 밥을 사줘가면서 해야할 일이다. 방어적인 글도 마찬가지로

이다. 방어적인 글이 방어가 되지 않고 도리어 공격본능만 자극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방어적이더라도 방어하는 태도를 속일 수 있어야만 방어적인 글이 된다.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솔직해야 한다. 최소한 글 자체는 솔직하게 보여야 한다. 그런데 여기에 다른 의도가 있다면 공감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자신의 생각을 전달할 수 없다면 글을 쓸 이유가 없어진다.

만연체

어떤 글은 오류가 없고 확실한데 너무 길다. 그 글은 읽히지 않는다. 독자가 읽으라고 쓴 글이 아니다. 글을 위한 글일 뿐이다. 독자에게 참을성을 요구해도 된다는 법은 없다. 아무도 읽지 않으면 글이 아니라 쓰레기다. 종이 낭비이다. 전문가적 견지에서 이런저런 점들을 모두 고려해서 쓴 글이라고 하겠지만 그건 논문이고 보고서이다. 그것을 대중에게 읽으라고 하지는 않는다. 그것은 학술 활동을 할 때 그렇게 하고 신문에 쓰는 글은 자기주장이 더 빨리 드러나게 써야 한다. 연구보고서라고 할지라도 읽는 사람이 보고받는 느낌이 아니라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애를 써야 한다면 보고서가 아닌 것이다.

산만한 글

말하고자 하는 주제에 집중하거나 글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

니라 이 얘기 저 얘기 산만하게 쓰여진 글이 있다. 이런 글들은 왜 나올까? 첫째 쓰는 사람의 머릿속이 산만하니까 그렇다. 둘째 자기가 안쓰고 이 사람 저 사람 손을 탄 글이다. 주관없이 검토를 받게 되면 무슨 말인지 헷갈리는 글이 되어버리는 것이다.

글을 쓰는 것에는 정답이 없다. 쓰는 사람마다 다른 주관을 가지고 있다. 여러 사람의 검토를 받았다 하더라도 결국 한 명이 읽고 취사선택을 해야 한다. 그런데 남에게만 맡긴 것이다.

가장 중요한 점은 버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써놓은 것이 아깝다고 버리지 않은 것이다. 좋은 문구도 주제와 관련이 없다면 과감히 버려야 하는데 아깝다고 버리지 않은 것이다. 모두 쥐고 있으면 글 전체의 논지가 흐려진다. 글은 써놓고 절반 이상은 버려야 한다고 생각해야 한다. 버리지 못하면 잘 쓸 수 없다.

글 경험이 없는 사람의 가장 큰 문제는 한 문장을 길게 써놓고 그 문장에 그 안에 표현하고 싶은 모든 것을 구겨넣는 것이다. 짜장면, 짬뽕, 볶음밥, 탕수육, 김치와 단무지를 큰 그릇 하나에 넣고 비벼먹는 것과 같다. 요리가 아니라 쓰레기가 되는 것이다. 한 문장에 하나의 뜻만 담긴 짙막한 글이 논리적으로 연결되는 것이 정치법이다. 이외수 선생의 정치법을 인용한다.

(전) 나는 사방에서 매미들이 주변의 나무들이 진저리를 칠 정도로 목청을 다해서 발악적으로 시끄럽게 울어대는, 맞은편에서 사람이 오면 비켜설 자리가 없을 정도로 비좁은 오솔길을 혼자 쓸쓸히 걷고 있었다.

(후) 나는 오솔길을 걷고 있었다. 혼자였다. 오솔길은 비좁아 보였다. 맞은 편에서 오는 사람과 마주치면 비켜 설 자리가 없을 정도였다. 매미들이 시끄럽게 울어대고 있었다. 발악적이었다. 주변의 나무들이 진저리를 치고 있었다.

정치법에서 벗어난 글은 글을 읽고 그것이 무슨 뜻인지를 생각하게 만든다. 잘못된 글이다. 글은 읽어가면서 그 뜻이 머릿속으로 들어와야 된다. 읽는 순간에 ‘그렇지, 그렇지!’하고 이해가 되어야 좋은 글이다. 모두 읽고 나서 ‘아 그런 뜻이었구나!’라는 느낌이 든다면 글을 읽는 동안 뜻을 몰랐다는 셈이 된다.

정신일도

한 가지 생각에 집중할 수 있다면 ‘성불’할 수 있다는 말은 그 게 어렵다는 것이다. 우리는 동시에 여러 가지 생각을 한다. 우리의 뇌는 소위 멀티태스킹(Multi-tasking)을 하는 구조인 것이다.

그런데 이것이 글쓰기에 방해가 된다. 실제로 여러 가지 생각이 머리에 떠오르더라도 한가지 생각에만 집중하여 쓴 글처럼 글이 나와야 하는 것이다. 원래 그렇게 생겨먹지 않은 사람이 그렇게 글을 쓰려면 특별한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글을 설계하고 뼈대를 잡고 살을 붙이는 작업을 순차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살을 붙인다고 했지만 비계가 붙은 것 같다면 다시 떼어내어 버리고 군더더기 없는 유선형의 글이 되도록 해야 한다. 정신일도를 할 수 없는 사람이 깔끔한 글을 쓰는 방법은 체계적으로 계획해서 글을 쓰는 것이다.

짧게 줄이기

요즘 젊은이들의 문자메시지를 보면, ‘어디?’ ‘뭐해?’ 이런 식으로 한 두 마디씩 던지면서 채팅하듯이 문자메시지를 주고받는다. 과거에 모바일 폰의 문자메시지의 갯수와 길이에 따라서 통신요금이 올라가던 시절이 있었다. 이 때에는 단문 문자메시지 하나에 말하고자 하는 것을 모두 넣기 위해 요약을 하고 글자수를 줄이는 훈련을 많이 했다. 신경써서 줄이면 글자 수를 절반 이하로도 줄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우리가 무심코 하는 말에는 낭비가 많았던 것이다.

5. 마음가짐

할 말이 있어야 한다

할 말이 없는데 글을 짜내면 정말 재미없는 글이 된다. 또 할 말도 없는 사람이 무슨 글을 잘 쓸 수 있겠는가? 이진 독자에 대한 모독이다. 할 말이 없는 사람은 글을 쓰지 말아야 한다. 이 말은 글을 쓰려면 콘텐츠(내용)가 있어야 한다. 오래되었다고 골동품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당대의 명품이 세월이 지나면 골동품이 되는 것이다. 글은 재주로만 쓸 수 없다. 좋은 내용이 있어야 한다.

낭중지추

나에게 좋은 송곳이 있다면 그것을 감추기 위해 주머니 속에 넣어서 숨겨도 뼈죽 튀어나오게 마련이다.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참으려 해도 참지 못하고 튀어나오는 것이 좋은 글이다. 그것이 글쓰는 이의 진심이기 때문이다. 진심은 강력한 전파력을 가지고 있고 통하는 글로 나온다.

듣는 사람에 맞춰라

자기주장을 할지라도 듣는 사람과 공감이 형성되지 않으면 내 글은 받아들여 지지 않는다. 그것을 나쁜 글이다. 듣는 사람

들이 읽고 판단할 수 있게 해주어야만 한다. 글쓴이가 어떤 주장을 하더라도 공감이 되지 않는다면 강요의 글이 되고 억지의 글이 된다. 먼저 마음을 얻어야 한다.

내 편으로 만들기

글을 읽은 사람은 내 편이 되는 것이 목표이다. 그게 글 쓰는 목표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내 편으로 만들 수 있는지 생각해야 한다. 예컨대 동질성을 찾는다는지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 우선 내 편으로 만들어야 내 글을 읽는다. 당신만 훌륭한 게 아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훌륭하다. 당신 글을 참고 읽어줘야 할 이유는 하나도 없다.

맷집

글을 쓴다는 것은 자기주장을 하는 것이다. 그러나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그게 사회다. 세상은 다 자기는 옳고 살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다. 그런데 나 뿐 놈도 있고 미운 놈도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내가 쓴 글은 누군가의 공감을 얻겠지만 누군가의 거부감도 받을 것이다. 어떤 경우에는 되치기를 당할 수도 있고 매를 맞을 수도 있을 것이다. 매 맞을 것도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한다.

6. 마무리

글쓰기는 모든 분야에서 기본이다. 이공계 출신에도 글쓰기는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논문, 보고서, 계획서, 발표자료 등 모두가 결국 글쓰기이다. 활동의 시작, 과정 그리고 끝이 모두 글쓰기가 필요하다.

그런데 이공계는 글쓰기를 중요시하지 않는다. 교육과정에서 글쓰기보다는 정답을 구하는데 더 치중하기 때문이다.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진출해서 일을 하게 되면 글쓰는 훈련이 되지 않은 것을 깨닫는다. 글쓰기의 중요성과 어려움도 깨닫는다. 그렇게 되면 글쓰는 연습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 후회하면서 매우 고통스럽게 글쓰기를 배우게 된다.

글을 쓰는 것은 배우는(Learning) 과정이라기보다 익히는(Training) 과정이다. 글쓰기 강좌를 아무리 들어도 실제로 자기가 글을 쓰고 수정하면서 배우는 과정이 없다면 글쓰기가 늘지 않는다. 어쩌면 모든 글은 글쓰는 법을 체계적으로 배우는 것보다 실전을 통해서 글쓰는 법을 스스로 익혀나가는 과정이다. 이 자료를 읽는데 말고 글쓰는 훈련을 많이 하기를 권한다.